

육군, 장교 충원 장려금 늘리지만... 직업 안정성부터 키워야

학군·학사 후보생 수년간 급감
연금수령 가능 소령 진급률 40%
“미래 불확실성이 기피현상 키워”

학군(ROTC)·학사 사관(장교) 후보생의 지원율이 수년간 급감하자 군 당국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고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장려금과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장교로 모집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려금 지급액 3배 증액...지원율은 반비례?

1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00만원이 지급되던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이 2022년에는 6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급액보다 50% 늘어난 금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고, 현재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인 상황이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급액은 꾸준히 인상됐다. 지난해는 2019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올해도 100만원이 늘어나 장려금은 400만원이 됐다. 내년에 600만원으로 장려금이 증액되면 2019년 대비 3배나 오르게 된다.

장려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사관후보생 지원율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육군 학사사관 66기 및 간부사관 42기 신입 소위들이 6월 25일 충북 괴산 육군학군사학교에서 열린통합입관식 행사 중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사진 첫줄 중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군

2014년 학군 사관후보생 모집 경쟁률은 6.1대 1이었지만, 지난해 2.8대 1로 반토막 났다. 대학 졸업 후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는 학사장교의 경우도 심각하다.

2015년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모집 경쟁률은 4.8대 1이었지만 2019년 3.4대 1로 줄었다. 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 모집경쟁률만 보면 학군 사관후보생보다 경쟁률 감소가 적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보면 제도 존립 자체가 힘들 정도다.

◆학사사관후보생은 폐지 위기... 훈련기간 포함 40개월 복무

학사사관후보생 과정을 통해 임관한 임명의 훈육장교는 “2015년 여군 사관후보생 과정이 학사 사관후보생에 통합되면서 실제 지원율은 낮아진 셈”이라

며 “과정 통합 전 여군·학사사관후보생 각각의 임관인원 수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되는 인원이 소위로 임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학사장교 동문회 관계자는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제도는 폐지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학사 사관후보생은 전·후반기 합쳐 1500~2000명 정도의 소위를 배출했지만, 올해 6월 임관한 66기 소위 임관자 수는 지난해보다 60여명이 줄어 478명(여성 81명 포함)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려금의 증액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수 인재의 장교 지원 기피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장교 직위의 중요성과 존중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먼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크게 줄어든 병 의무복무 기간이 사관후보생 모집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 3·4학년 재학 중 군사교육을 이수해 졸업후 즉시 소위로 임관하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28개월이다. 대학 졸업 후 16주(육군 기준)의 군사교육을 받는 학사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군사훈련 기간을 빼고도 36개월이나 된다.

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 사실상 병 의무복무 기간보다 2배 이상 복무해야 하는 셈이다. 학사 사관후보생 출신 장교는 사관후보생 기간이 호봉과 근속연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때문에 단기복무 장교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복무기간 단축 신중해야... 장교충부실화 경계

국방위에 제출된 자료 따르면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회숙소요증가, 전·후임자 교체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초급 장교를 선발 인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병력감축의 주대상인 육군은 이미 ‘대량임관-대량전역’이라는 ‘인력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 군 장교 또는 부사관 지원자의 다수는 공무원과 같은 ‘직업적 안정성’을 생각하지만 10년(부사관은 7년) 이상 복무기간을 보장받는 장기복무 선발률은 30%에도 못 미친다.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더라도 장교의 경우 연금수령 가능 복무기간이 보장되는 소령의 진급률은 40% 내외다.

해·공군의 소령 진급률이 80~90%인 점을 감안하면, 육군은 초급장교를 더 많이 뽑아 더 많이 버려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소령의 계급정년이 연장될 경우 진급 적체현상은 더 심각해진다. ‘직업적 안정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되는 우수 인재의 기피 현상을 더 키울 수도 있다.

병 복무기간의 단축에 따른 군구조 간부화는 장교와 부사관의 직무 전문성이 전제조건이다.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예비전력 약화로 이어져 군간부층에 대한 신뢰저하가 더 심하게 질 위험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때문에 미국·영국 등 군사 선진국처럼 군장교 복무가 시민들에게 선호되고 존경받는 경력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홍남기 “디지털세 등 국익 극대화 최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G20·IMFC 회의 참석

13일 밤미... 다국적기업 과세권, 기후변화 대응, 탄소가격제 등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관련, 국제사회에 구글 등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 대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등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가격제 도입 등을 논의하며 국익 최우선 목적으로 우리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연내 최종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주요국들은 연결기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오는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우리 기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업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적용엔 1~2년 걸리겠지만 발효 시점부터 당연히 과세권이 발동된다”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세는)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해왔다”며 “10월 중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도 만나 세계 경제 위협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IMF의 SDR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는 WB 한국사무소 기능 강화 등 한-WB 간 협력 방안을, 마우리시오 클라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는 한국과 IDB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이어 14일에는 ‘세계경제동향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정책제’를 주제로 국제통화기금위원회(IMFC) 회의가 열린다.

홍 부총리는 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형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와 협력해 나갈 뜻을 밝힐 예정이다.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홍 부총리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들도 차례로 만난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도 만나 세계 경제 위협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IMF의 SDR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는 WB 한국사무소 기능 강화 등 한-WB 간 협력 방안을, 마우리시오 클라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는 한국과 IDB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길 연다

선박·항공 물류비 5~7% 추가 지원

최근 물류대란에 농식품 수출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선박·항공 등 물류비를 5~7%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 전용 선박 노선도 올해 하반기부터 미주 서안에서 호주 시드니 등 일부 도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수출 물류 지원 확대 계획을 11일 밝혔다. 선적 공간(선복) 부족, 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농식품 수출 여건을 극복하고, 올해 하반기 농식품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적선사인 HMM과 협약을 맺어 지난 7월부터 미주노선 선박에 농식품 전용 선복 물량(월 200TEU)을 확보했다. 또, 이 선박을 활용하는 수출업체에 추가 물류비 5%를 지원해왔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식품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으로 선박 운임의 경우 전용 선박 이용과 상관없이 모든 농식품 수출 품목에 7%의 수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운임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동남아는 5%를 추가 지원한다. 운임이 연초보다 하락한 일본·중국 노선은 제외된다.

항공 운임도 전 품목을 대상으로 5% 추가 물류비를 지원한다.

농식품 수출업체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선박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굴뚝 미세먼지 5년 새 최대 폭 26% 감소

국내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난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20만5091t으로 2019년 대비 7만 2604t(26%)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연간 감축 비율로는 최대치다.

이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곳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세종=원승일 기자